

서울특별시

수입산 닭고기, 국내산 둔갑 업소 '철퇴'

서울시는 여름철 성수식품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0개소에 대해 지난 7월 25일~8월 15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개소는 형사입건, 3개소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외국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원산지 무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권해윤 특사경지원과장은 "적발된 업소 13개소 가운데 7개소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떡, 한과류 등 추석 성수식품과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수입식품을 원산지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추적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양계사 깔짚 재활용 시범사업 현장평가회' 개최

'양계사 깔짚 재활용 시범사업 현장평가회'가 충남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주관으로 지난 8월 20일 부여읍 상금리 이레하 양계농가에

서 양계연구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양계농가들은 사육 중 발생하는 계분처리 및 관리가 어려워 양계사 청결유지와 질병발생에 큰 문제점이 대두돼 왔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갖은 평가회에서 깔짚 재활용기계를 활용해 깔짚인 왕겨와 계분을 분리해 양계사 내의 유해가스발생을 줄이고 분리된 깔짚왕겨를 재활용해 계분처리 비용을 회당 336만원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평가회에 참석한 방진우씨(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농가는 "창문이 없는 무창계사 뿐만 아니라 유창계사도 깔짚 재활용 기계를 사용하면 유해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병이 줄어들고 양계사 환경이 개선돼 결국 닭의 증체량 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교육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시범을 확대 보급해오고 있다.

서산시, 원산지 표시 자율 감시단 위촉

서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5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6일 자율감시단을 위촉하고 감시 활동에 나섰다.

감시단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44명으로 구성해 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 및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감시단 위촉식에서 유상곤 시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선진국형 신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감사단에게 실질적인 단속에 도움이 되도록 각 읍·면·동 원산지표시 단속 특별 사법경찰, 서울시청 특사경 팀장을 강사로 초청, 원산지표시제의 지도·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100㎡ 이상 음식점과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과 오리고기와 배달용 튀김 닭 등도 포함했다.

충청북도

청주 상당구,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점검

배달용 치킨 등의 원산지 표시가 유명무실하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청주시 상당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원산지 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상당구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쌀과 김치류의 경우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고, 가공 김치는 배추뿐 아니라 수입 김치속·고춧가루·마늘 등 제2원료까지 확대 시행되고, 모든 음식점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은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법 제정·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당구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여부, 식품 보관 상태, 음식물 재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상당구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음식점, 가공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하반기 가축질병 예방 총력

울산시는 돼지(열병, 단독), 개(광견병), 닭(뉴캐슬병), 꿀벌(응애류) 등의 질병예방약품 187만9,400두(군)분을 지난 8월 30일부터 사육 농가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별로는 돼지 5만8,000두(열병 2만5,000두, 열병·단독 3만3,000두), 닭(뉴캐슬병) 180만수, 꿀벌(응애류) 1만6,000군 등이 공급된다.

울산지역 돼지 사육규모는 77농가(3만4,000두)로 오는 2013년 돼지 열병 근절에 따라 울산시는 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닭 뉴캐슬병, 꿀벌 응애류 등은 양축농가에 산란을 저하 등의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 정기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닭·오리 7만 마리 불법 도축 업주 '영장'

불법으로 닭과 오리를 도축, 식당 등에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울주경찰서는 지난 8월 9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을 설치, 닭과 오리를 도축해 식당 등에 공

급한 A식품 대표 최모씨(39)를 적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년9개월 동안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 922.18㎡ 크기의 축사를 허가 없이 차려놓고 닭과 오리 약 7만 마리(5억7150만원 상당)를 도축, 판매한 혐의이다.

경찰은 또 최씨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50㎡ 이상의 사육시설을 사용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리 등 1,500여 마리를 사육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불법으로 도축한 닭·오리를 수 년 간 울산과 양산 일부 지역 10여개 식당 등에 공급, 수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농촌마을 인접 축사 외곽이전 추진

농촌마을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축사를 단계적으로 마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8월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까지 1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농촌마을에 있는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도는 이번엔 마을에서부터 돼지·닭·오리·개는 500m, 한우 등 기타 축종은 100m 이내에 있는 축사 위치와 환경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이전이 필요한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비,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 내 낡고 오래된 축사를 쾌적한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단계적으로 모두 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암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영암군은 지난 8월 8일 “도시지역과 주택 1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5일자로 인가 10호를 초과할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거리로 한우는 200m, 닭·오리·개·돼지(무창형)는 700m, 돼지(개방형)는 1,000m, 기타 그 이외의 가축은 200m로 개정 고시했다.

이는 기존에 한우 100m, 닭·오리 300m, 돼지 600m, 기타 그 이외의 가축 100m 보다 강화된 것이다.

군은 이번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를 통해 축사 신축을 억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공장과는 달리 가축분뇨 악취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 방지를 위해 축산시설 규제대책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양계산학협력사업 성과 나타나기 시작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현장의 농업인 애로기술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학·관·연 협의체인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을 쌀, 고구마, 오미자, 한우 등 7개 작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계협력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양계는 전북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목으로 전국대비 육계 25%, 토종닭 50%를 생산하며 도계부분은 약 35~40%를 점유하고 있고 도내 농가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양계산업의 메카로서의 장점을 살리고자 선정했다.

전북 양계산학협력단(단장 류경선 전북대학교)에서는 전북지역 양계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2007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양계 산학협력단 설립초기에는 농가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사업추진 방향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0년 현재 전북지역 200여 양계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컨설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009년 농촌진흥청 주관의 사업단 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양계 산학협력단은 양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위원이 45명 참여하고 있으며, 사양·질병관리팀, 환경·시설관리팀, 경영분석관리팀, 마케팅·홍보팀, 수출활성화팀, 행정지원팀 등 6개 팀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성과로는 '프로안토시아닌'을 닭에 투여해 가금면역력을 활성화시켜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친환경 인증 닭고기 생산을 연구 중이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닭사육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닭 사육단계 HACCP 지정을 위한 양계농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또한 양계 산학협력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계육을 가공하는 학교기업 전북대협에서 스모크치킨, 닭가슴살, 치킨윙 등을 개발해 유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한국토종닭 협회(회장 김연수)와 공동으로 중국에 토종닭 증계를 수출할 예정이고, 지역기반의 계육가공회사인 (주)싱그린푸드시스템과 공동으로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노계육과 고부가가치 인삼토종닭을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전북 양계 산학협력단은 지역 토종닭 사육 전문인을 육성해 토종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북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원에 최고농업리더과정 양계반을 운영 중이며, 이 과정의 참여농가들에게 토종닭 사양관리일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토종닭 사양관리 및 경영기록관리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 계산물 유통전문회사인 전북한닭농업법인 설립을 지원해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계산물 생산, 계육가공품 개발, 치킨코스요리 체인화 사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친환경토종닭 생산 및 유통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북지역 양계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축산업 경영 한단계 업그레이드

방역과 환경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경우에만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제주도의 축산업 체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올해 초부터 발생한 국내 구제역방역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우리나라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시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 질병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용역결과 및 축산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절한 가축사육밀도 유지 및 질병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등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축종을 확대, 소·돼지·닭·오리에서 산양·면양·사슴·칠면조·거위·메추리·평·타조·관상조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등록대상 농가도 확대, 사육시설 50~300㎡ 초과에서 50㎡초과로 대폭 조정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축산농가는 근로자에 대한 방역조치 및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해 소독의무화 및 모든 출입자를 의무소독대상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 전파방지, 발생시 신속한 역학적 추적을 위한 '가축거래 상인 신고제 도입'과 미신고 상인 가

축거래 금지방안을 마련하며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는 입국시 공·항만 검역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게 된다.

도는 이번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축산업 등록, 축산환경, 축주 및 관련자 등의 방역의무 강화 등 축산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축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선방안의 본격적인 시행시에는 축산농가의 의식수준 향상은 물론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에 발맞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강화는 물론, 제주 축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발전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고 9월 중 각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 대 농가 홍보강화로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0년 10월 8일(금) 13:30 ~ 19:00
-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흥인호텔
별관 21층 스카이홀
- 주최 : (사)한국계육협회

※자세한 내용은 P31 '협회소식'을 참조하세요!